



韓寶 사태의 敎訓

李 在 雄 (연구자문위원, 성대 교수)

재벌랭킹 14위, 그리고 은행여신 규모로 10위에 이르는 韓寶그룹이 한보철강의 부도발생으로 쓰러질 운명에 놓여 있다. 지난 1월 23일 한보철강의 부도발생 이후 61개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공동관리단은 무엇보다도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보그룹의 不渡금액을 집계하고 日日 보고를 작성하는 데 영일이 없는 것 같다.

한보사태의 원인을 놓고서 서로 상반된 논란을 빚고 있다. 당초의 부도발생 원인은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비가 터무니없이 늘어난 데다가 철강경기가 부진하여 在庫가 쌓이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났다는 것이다. 한보측에서는 은행들이 돈을 더 꾸어주지 않아서 부도가 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한보사태의 원인이라기보다 증상이다. 다시 말해서 부도가 날 때에는 으레 그와 같은 증후군이 나타난다. 특정기업에 집중적으로 대출해준 그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不實貸出로 전락하게 된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은행의 총체적인 不實化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한보사태로 은행이 不實化된다기보다 오히려 은행의 貸出審査기능이 不實하고 책임경영체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한보 부도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듯하다.

도대체 은행은 韓寶의 무엇을 믿고 한보자본금의 20배가 넘는 돈을 꾸어주었는가. 부도가 나는 와중에서도 한보측은 재산권을 고집했다고 한다. 자기 돈 5원으로 100원을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한보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은행들은 담보도 부족한 한보철강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무제한으로 與信을 확대했다.

銀行法상 同一人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자기자본의 15%이다. 특수한 경우에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더라도 20%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同一人 대출한도가 차서 더 이상 대출이 어렵게 되자 주거래은행은 그런 제한이 없는 信託자금으로 추가대출을 해 주었다. 즉, 은행은 실제로 은행(계정)업무와 신탁업무를 兼營하며 신탁자금의 비율이 은행 전체자금의 약 반 가까이 되는데 은행계정만 同一人여신한도로 묶어놓은 제도 자체는 커다란 盲點을 마련해 놓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은행의 특정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同一人 대출한도제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1개 은행에서 1조원이 넘는 여신이 不實化될 운명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때 은행들은 한보에 돈을 더 꾸어주지 못해서 안달을 했던 것 같다. 도대체 은행의 그같은 속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관련 은행들은 이것이 당초에는 어디까지나 은행이 판단해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금융거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는 국민의 여론은 배후에 정치권의 外壓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과거의 대부분 대형 금융사고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지 모른다. 그래서 한보사태를 부정부패의 표본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은행 임직원들이 한보사태로 곤욕을 치를 지는 알 수 없으나 근래에 비슷한 금융비리 등으로 사법처리된 은행장의 숫자만 해도 적지 않다. 물론 이같은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 그래서 은행장들은 매우 위험한 러시아 룰렛(Russian Roulette)게임을 해왔다. 文民政府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은행장 중 금융비리 등으로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대략 두 명 중 한 명 꼴이며, 특히 사법처리된 경우도 여섯 명 중 한 명 꼴이다. 따라서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금융비리를 저질러야 할 이유와 그에 따르는 비용을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외압이나 뇌물을 받고 부실대출을 해주면 安全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위태롭다면 한보사태와 같은 금융비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아무리 外壓으로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 반드시 감옥으로 간다면 차라리 은행장을 그만 두는 편이 낫지 감옥을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不實貸出을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 나라의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先進化하려면 금융거래 및 관행이 투명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健全經營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제는 금융산업 자체에 못지 않게 낙후되어 있다. 검사人力도 부족할 뿐 아니라 專門人力 및 첨단검사 기법 등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 당초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금융不實化 및 비리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금융규제 및 인허가 등을 강화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기능이 사후적으로 할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감독은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감독기관들이 각기 제 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한보그룹이 터무니없는 자금대출을 요구하더라도 우선 은행들이 대출심사기능으로 제지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은행대출에 대한 감독기관의 검사기능이 이를 二重으로 견제했어야 한다. 감독기관이 엄

정하게 금융기관을 감독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융부실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면 금융개혁도 규제완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公信力이란 감독당국의 공신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外壓을 차단하고 금융不實化를 막기 위해서 은행의 責任經營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은행의 責任經營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보다 정부개입의 여지를 남겨두는 데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은행은 마치 국영기업체와 같다.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그렇고,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하고 보호하는 것도 그렇다. 그 결과 非能率이 심하며 과도한 人力과 방만한 조직, 그리고 高비용 低효율 구조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그 피해는 물론 高金利를 물고 심지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不實費用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 가게 등 금융소비자의 몫이다.

정부는 은행의 소유구조와 관련해서 言必稱 재벌의 금융지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그치지 않는 것이 우리 금융의 커다란 딜레마이다. 결국 은행이 국영기업체 아닌 국영기업체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재벌의 私金庫가 되느냐,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選擇이냐는 논의는 이제 무의미하다. 두 가지가 모두 금융을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한보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보그룹의 子會社인 한보상호신용금고는 예금자의 자금을 모아서 同一人 여신한도에도 불구하고 한보철강에 집중 대출함으로써 역시 그룹의 私金庫임을 立證했다. 재벌이 金庫 대신에 은행을 소유한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은행의 경쟁력을 提高하기 위해서 主人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창 목청을 높이는 마당에 주인이 확실한 금융기관이 그 때문에 不實化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代案으로 제시된 것이 非常任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이사회제도가 과연 정부 및 산업자본의 횡포를 막고 은행의 責任經營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밖에도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전업 기업가가 은행을 소유하는 방식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여러가지 가능성을 남겨두려다 보니 근본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은 이번에 설치된 金融改革委員會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정부는 더 이상 금융규제나 개입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결과로 不實化되는 금융기관을 정부가 구제할 능력(safetynet)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정부가 원하는 원치 않든간에 不實化가 더욱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대규모 도산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아닌 재벌의 구제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 그런 징후는 이미 농후하다. 결국 금융부실화를 초래하는 정부규제 대신에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업의 財務構造가 지극히 不實하고 은행의 貸出審査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의 실체라고 본다. 韓寶가 극도로 不

實한 재무구조를 갖고 터무니없는 기업확장을 일삼을 수 있었던 까닭은 은행이 무분별한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근래에 우리 기업의 금융비용이 過多하기 때문에 金利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데 한보사태가 터진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같이 모든 것이 모호한 환경(Universe of ambiguity)에서 정확한 자금수요나 자금용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보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빌려서 어떻게 썼는지도 분명치 않다는 이야기이다. 또 앞으로 한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이 얼마나 더 부담을 져야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信用分析이나 대출심사 기능이 없는 은행은 전당포나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전당포는 담보라도 확실하게 잡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가.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상학사(1966)
미국 Southern Methodist 대학교
경제학 석사(1972), 경제학 박사(1974)
미국 Manufacturers Hanover Trust 은행
경제조사역(1974~78)
산업연구원(KIET) 동향분석실장(1978~82)

성균관대학교 교수(1982~현재)
무역대학원장(1994~95), 기획실장(1995~96)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1982~현재)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1983~현재)
한국금융학회 회장(1993~94)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1994~현재)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후원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근거:
 - 법인회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
 - 개인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4호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551-3334/7 Fax: 551-3339
E mail: IGENET@chollian.dacom.co.kr